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.11.16.(월)

한성숙 총리, “AI 기술 악용 시험 부정행위” 범부처 역량 응집하여 강력 대응 지시

- 한 총리, ‘27학년도 수능 시험(11.19) 앞두고 집중 점검회의 개최
- 수능 시험장, △모든 종류 스마트기기 반납 △공공 Wi-Fi 차단 등 추진
- “AI 기술 악용 부정행위” 무관용 대응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·엄정 조치
- 범정부 TF를 통해 국가 주관시험 관리·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 지시

□ **한성숙 국무총리**(이하 한 총리)는 11월 16일(월) 정부서울청사에서 **관계부처 회의***를 개최하여 **AI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**를 **방지**하기 위한 **대책**을 **논의**하였다.

* 교육부, 노동부, 재경부, 과기부, 법무부, 행안부, 인사처, 경찰청

○ 이번 회의는 **최근 AI 기술**을 **악용한 시험 고득점·합격 사례** 등 **첨단 스마트기기**를 활용한 **시험 부정행위**가 **확산될 우려가** 커지고 있는 가운데,

○ **당면한 ’27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**(11.19(목))을 비롯한 **각종 시험에서** AI를 활용한 **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**를 **철저히 예방·대응**할 수 있도록 **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**를 **구축**하고 **대응 방안**을 **점검·논의**하기 위해 개최되었다.

□ 한 총리는 우선 **이번주 11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**을 앞두고, 수능에서 스마트안경,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 **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**가 발생하지 않도록 **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**해 **철저히 대비**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.

○ 이를 위해 **’27년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**하여 사전·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·이행할 것을 주문하였다.

○ 우선, **교육부**를 중심으로 수험생들이 **시험장에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**하도록 하고, **시험중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**에 대해 **철저하게 점검**할 것을 지시하면서,

- **선의의 수험생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**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하였다.

- 특히, **과기부**에 대해서는 **수능 시험 시간** 동안 **모든 시험장**에 대해 **공공 Wi-fi를 차단하는 방안**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검토토록 요청하였다.

○ 아울러, **시험 이후**에도 제반 상황에 비추어 상식에 벗어나는 등 **이상징후**에 대해서도 **철저하게 확인· 점검 후 엄정하게 조치**할 것을 주문하였다.

- **시험이 종료**되었다는 이유로 **부정행위가 묻히는 일이 없도록**, **사후**에라도 **부정행위가 확인**되면 **합격 취소, 응시자격 제한, 수사의뢰** 등 **법과 원칙**에 따라 **끝까지 책임**을 물을 방침이다.

- 이를 위해, **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적극 가동**하여 부정행위 관련 신고와 제보를 신속히 접수·처리하고, **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**하여 **의심사례를 철저히 조사**할 계획이다.

□ 한 총리는 **여타 국가 주관 시험**에 대해서도, **기존의 시험관리 방식**만으로는 **AI 기술 발전**에 따른 **새로운 부정행위 수법 대응에 한계가** 있다고 강조하면서 **범정부적 대응 체계 구축**을 주문하였다.

○ 이를 위해 **각 시험 소관 부처별 준비 상황**을 **면밀히 점검**하고, 범정부적으로 **공통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**을 위해 **"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TF**(가칭)"를 구축·운영할 것을 지시하였다.

○ 이에, **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중심**으로 **국가 자격시험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**를 통해 **기존 시험의 필요성·효과성** 등을 고려한 **정비 방안을 마련**하는 한편,

○ **시험 장소·부정행위 점검 방식** 등에 대해서도 **AI 확산**에 **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***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.

* (예) 공인된 시험장소 구축, 시험장별 스마트 검색대 설치 등

○ 아울러, **관계부처가 협업**하여 **상시적으로 부정행위를 신고**할 수 있는 **온·오프라인 신고체계**를 구축하고, **실제 확인된 부정행위**에 대해서는 **행정제재, 형사 처벌 등 가용한 모든 수단**을 검토하여 **엄정 조치**할 것을 요청하였다.

○ **과기부를 중심**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**시험장**의 ▲**공공 Wi-Fi 차단** ▲**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** 등 **다양한 방안을 모색**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.

□ 또한, 한 총리는 **이미 밝혀진 부정행위 사례**에 대해서도 **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**하여 **유사한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**을 지시하였다.

○ 최근 문제가 된 **세무사 수석합격자의 부정행위**에 대해서는 **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**를 **신속히 개시**하는 한편, **경찰과 유관기관의** 적극적인 **수사 협조 및 조사**를 당부하였다.

○ 아울러, **재발 방지**를 위해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한 **제제·처분 조치를 강화하는 법령·제도 개정도 함께 검토·추진**해줄 것을 요청하였다.

□ 한 총리는 "**시험의 공정성**은 **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**하는 기본 원칙"으로 "**일부의 부정행위**로 **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**들이 피해를 보거나, 시험제도에 대한 **국민의 신뢰가 훼손**되어서는 안된다."고 강조하면서

○ "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**공정한 시험 환경 조성**을 위해 **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**하여 **모든 역량을 총동원**해줄 것"을 지시하였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교육문화성평등정책관실	책임자	팀 장 형성희 (044-200-2321)
		담당자	사무관 송지애 (044-200-232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